

第七篇 現 代



大邱市街(半月堂)

第 1 章 政治狀況의 變遷과 大邱市

第 2 章 大邱直轄市時代

第七篇 現 代

第1章 政治狀況의 變遷과 大邱市

第1節 解放과 軍政期

I. 日本의 敗亡과 社會秩序

1945년 8월 15일! 한국을 병탄하고 동아시아를 송두리째 점령하려던 일본 제국주의 침략 세력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하였다. 이로써 우리민족의 항일 독립투쟁은 결실을 맺게 되었고 제국주의의 압박으로 부터 광복을 찾게되었다. 한민족의 항일투쟁은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자주독립 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리는 데에 주효하여 전후처리를 위한 강대국의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약속 받게 되었다. 1943년 11월 카이로 선언에서 '한국을 적당한 시기에 자유 독립시킬 것'을 결의하였고, 1945년 7월 포츠담 선언에서 '일본의 주권은 일본본토 4개 섬과 그 부속 도서에 한한다'는 내용으로 재확인 하였던 것이다.

패망이 임박하자 총독부는 잠정적이거나 국내 질서를 유지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안전하게 귀국 시킬 목적으로 국내 민족지도자들의 협력의사를 타진하였다. 총독부에서는 처음 비교적 온건한 민족지도자로 지목된 동아일보 사장 宋鎮禹에게 접근하였으나 거절 당하자 呂運亨에게 접촉을 시도하여 치안권 외에 약간의 재정권을 인정해 주게되므로써 8월 14일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게 되었다. 이 건국준비위원회에는 사회주의자들이 다수 참여하여 강력한 정치세력으로서 전국의 치안을 유지하였고 조직적 활동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宋鎮禹, 金性洙 등 소위 민족주의 우파계열은 呂運亨, 安在鴻 등의 건국준비위원회를 공산주의 세력으로 간주하고 동조를 거부하는 동시에 상해 임시정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임시정부 환영준비위원회」를 세워 이와 대립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속에 해방이 되던 이 감격의 날, 대구의 모습을 생생히 그려놓은 글이 있어 옮겨 적듯이 다시 써 본다.¹⁾ 이 지방 유지들도 일본의 패망과 민족의 해방이 눈앞에 닥아오고 있음을 짐작하고 정세의 추이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8월 14일 저녁방송을 통해서 이튿날 일본정부로부터 중대 방송이 행해지리라는 예고가 있자 대구 시내 일부 지도급 인사들은 15일 이른 아침부터 徐相日 자택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오전 9시 경, 일본군 대구지구 헌병대장 간다(神田)대좌가 정장차림으로 徐相日을 방문하여 그를 헌병대로 초치하였다. 그리고는 일본이 패망한 사실을 정중히 전달하고, 일본인이 물러갈 때까지 주민이 동요되지 않고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눈물로 간청하였다.

함께 모였던 인사들은 서상일을 통해서 일본이 패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일제히 환성을 올리면서 조국의 앞날을 축복하는 축배를 들었다. 이 날이 마침 서상일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생일의 축배가 조국광복의 축배로 바뀌었던 것이다. 12시 정오방송으로 중계된 일본천황의 떨리는 음성은 연합국의 공동성명 조항을 무조건 수락한다는 내용이었고 이로써 전국 방방곡곡에 일본 패망의 소식이 울려 퍼졌다.

대구에 본사를 둔 유일한 일간신문 大邱日日新聞社의 사장 가와이(河合)와 일본인 기자들은 자국의 패망 소식에 쓰라린 눈물을 흘린후 다투어 한국의 독립을 축하하는 축배를 들었고, 관공인이나 민간인을 가릴 것 없이 일본인은 누구나 통곡하였으며 때로는 쓰러지는 광경도 볼 수 있었다. 정오가 지난 후 대구거리는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약삭빠른 일본 상인들은 상점문을 닫고 자취를 감추었으며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지금의 중앙공원 자리에 있던 경북 도청에서는 3백여명의 직원들이 일본천황의 항복 방송이 끝난 도청회의실 스피커 밑에 그대로 서서 당시 한국인 도지사 金大羽의 약 40분간에 걸친 연설을 들었다. 연설 내용은 한국인과 일본인의 각각 취할 바 자세에 관한 극히 형식적인 것이었고 직원들은 제자리로 돌아가 각자 태극기를 그리기도 하고 애국가를 외우기도 하였다. 대구 부청에서는 우에노(上野)부윤이 출입기자들을 불러놓고 자기는 한국에 남아서 한국인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협력을 호소하는 거짓말도 있었다.

오후 3시경에는 당시 달성공원 앞에 있던 조양회관에서 출발한 청년 만세시위대가 태극기의 물결 속에 거리를 메웠고 거리에는 한글 벽보가 나붙기 시작하였다. 한글 벽보는 일본인들을 안전하게 송환시켜 한국민의 아량을 보이자는 내용과 일본인의 재산을 함부로 매매하지 말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 이튿날부터 만세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일제에

1) 《大邱市史》 제3권 pp.61~64 및 《慶尙北道史》 中卷 pp.511~513.

항거하여 투옥되었던 항일투사들이 형무소에서 풀려 나왔다.

해방후의 정국은 국내 지도자들의 의견 대립으로 크게 양립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는데 하나는 여운형·안재홍 계열의 建準으로, 건국준비를 서둘러 연합국이 진주하면 권력을 이양받아 정권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송진우·김성수 계열로 해외의 독립투사나 임시정부 요인들이 돌아 올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무렵 정당으로는 좌익계열의 조선공산당이 생겨나고, 우익계열 민족진영을 모두 통합한 한국민주당이 창당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구에서도 지도급 인사들은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게 되었다. 대구의 지도급 인사로는 徐相日·金觀濟·鄭雲海·嚴成文·李在榮·白南採·李慶熙·鄭命俊·吳麒洙·徐東辰 등이 서상일·김관제를 중심으로 회합하면서 민족운동을 논의하고 지원하기도 하였다. 서상일과 김관제는 安熙濟·李始榮·申性模 등과 비밀결사인 대동청년단을 조직하여 국내에서 지하운동을 한 바 있다. 대구 인사들 중 김관제·정운해를 중심으로 16일 밤 건국준비위원회 경북지부를 조직하였고 이에 동조하지 않은 인사들은 서상일을 중심으로 대구일보사에서 경북치안유지회를 조직하였다. 전자는 좌익계열, 후자는 우익계열의 색채를 나타내게 되었으나 10여일 후 필요성을 인식하고 쌍방의 협의에 따라 「건국준비 경북치안유지회」로 통합하였다.

비록 치안유지회의 활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체계적일 수는 없었으므로 해방후 2개월간은 행정의 마비로 인한 혼란이 계속될 수 밖에 없었다. 새로운 행정체계가 갖추어질 때까지 관청에는 한국인 관리만이 직장을 지키고 있었지만 업무수행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었다. 행정기능이 마비되자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압박에서 해방된 기분에 들떠 ‘자유’, 자유만을 부르짖으며 방종과 자유를 구별하지 못하는 지경으로 빠져 들었다.

일본은 전쟁 말기에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쟁물자를 조달하였기 때문에 국내의 경제사정은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다. 게다가 해방을 맞은 분위기의 전환으로 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나타나고 국외로부터 귀국하는 무의탁 이재민의 수가 증가함으로 인하여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일본인 기술자의 퇴거로 인한 기술부족 현상으로 일본인이 경영하던 사업체가 문을 닫으면서 실업자가 속출하게 되었고 실업자의 증가에 설상가상으로 생산기능의 마비에 따른 물가가 앙등함으로써 극심한 악성 인플레이를 초래케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어지러운 가운데 해방이후 약 1년간 대구시내에 발생한 화재건수는 120여건에 달하고 인명 피해도 수십여명에 달하여 3일에 한번씩 화재가 발생한 셈이며 1945년 9월 29일 대구역 구내에서는 열차 충돌사건이 발생하여 150여명의 사상자를 내었고 그중 73명이 즉사하였다. 또 1946년에는 전국적으로 대홍수가 나서 수재가 막심한 데다가 당시로서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치사률이 90%가 넘는 콜레라가 만연하여 경북도내 1,400여의 희생자를 내었다. 이러한 경제적 불안 뿐만 아니라 잇달아 재난이 발생하여 사회를 더욱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고 실로 엄청난 피해를 안겨 주었던 것이다.

II. 美軍政과 過度政府下의 大邱

일제가 패망한 이후 미군이 한반도에 진주한 것은 1945년 9월 8일이었다. 소련군은 8월 9일부터 극동전쟁에 참가하여 8월 11일에는 이미 한반도에 진출해 있었지만 미군은 최전방 부대가 오키나와에 머무르고 있다가 소련 보다는 한달이나 늦게 진주한 것이다. 미군은 서울에 진주하여 일본군의 정식 항복을 받고 북위 38도선 이남의 지역에 군정을 실시한다는 미군사령부 명령 제1호(태평양지구 사령관 맥아더장군의 포고령 제1호, 1945. 9. 7.)를 발표하였다. 이로써 3·8선이라는 이름으로 남북이 분단되고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분할하여 통치하게 되었다.

미군의 군정이 시작되기 한달쯤 지난뒤에 대구에도 군정이 실시되었다. 미군이 대구에 온 10월 1일에 일본군의 근거지를 접수하고 일본군을 무장해제 하는 한편 경북도청과 대구부청 등 관공서도 접수하였지만 10월 10일에야 미군대령이 경북도지사, 그리고 미군대위가 대구부윤으로 취임하였다. 그로부터 3일후에 일본 관리들을 전부 파면하고 행정기구 개편을 단행하면서 대구의 치안을 대구부윤이 관할하여 자치조직인 치안유지회를 해산하고 대구 경찰서의 기능을 장악하였다.

美軍政의 실시로 한국인에 대한 일제의 민족적 차별을 규정한 모든 법령을 폐기하였고 이렇게 함으로써 법적으로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게 되어 수없이 많은 정당 및 사회단체들이 난립하게 되었다. 실제로 1945년 12월까지 4~5개월 동안 대구에는 80여개의 정당 단체들이 진출해 있었다. 이때 나타난 정치단체들은 보수나 진보, 자유주의나 공산주의 등 어느 면에서도 제한 받지 않았으므로 '해방이 가져다 준 무질서'가 사회의 실제 모습이었다. 정당 뿐만 아니라 언론과 출판의 자유에 따른 언론기관의 난립으로 해방 이듬해 5월까지 나타난 대구의 간행물 수는 일간신문이 7종, 주간신문이 4종, 월간지가 18종이나 되었으며 그 후로는 허가제로 바뀌어 더 증가하지는 않았다.

이 무렵, 1945년 12월의 모스크바 3상회의(미·영·소 3국외상)에서 발표된 '한국을 향후 5년간 신탁통치 한다'는 내용은 한국민으로 하여금 울분을 터뜨리게 하였다. 이 신탁통치안이

전국에 보도되자 정당 단체들은 일제히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투쟁을 결의하였다. 서울에는 신탁통치 반대투쟁위원회가 구성되어 투쟁방안을 모색하고 한국임시정부 명의의 선언문이 발표되었으며 난립했던 정당들이 처음에는 좌우익을 막론하고 신탁통치 반대에 동참하였다.

대구에서도 각 정당 단체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모두 반탁운동에 참여하였다. 특히 당시 대구에는 경북인민위원회, 대구인민위원회, 대구부녀동맹 등 좌익 단체가 매우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들도 모두 동참하였다. 1월 초부터 대대적인 시위가 연일 진행되었으나 1월 4일 박헌영의 평양방문을 계기로 좌익 공산계열은 소련의 지시에 따라 찬탁으로 표변하였다. 이 때부터 좌우익이 분열되어 운동세력은 양분되었고 민족진영 단체들이 좌익 계열의 찬탁을 분쇄하기 위해 단결하여 극렬한 시위투쟁을 전개하므로써 8월에는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어 무기한 휴회에 들어갔다.

美軍政의 실시후 대구는 처음 경상북도 도청소재지였기 때문에 행정기구는 도지사 아래 기획부·내무부·재무부·광공부·농상부·경찰부와 그 아래 21개과, 그리고 일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재산관리국을 별도로 두었고, 대구부에는 부윤 아래 총무과·생활과·산업과·교육호적과·후생과·재무과 등을 두었다가 조금씩 개편하여 1946년말에는 도청에 인사국·내무국·농무국·재무국·상공국·학무국·노동국·재산관리국 등 2처 8국으로 바꾸었고 대구부에도 총무과·학무과 등 8개과로 개편되어 있었다. 이 밖에 행정고문제도를 두어 군정당국이 임명하는 관선고문과 각 세대주가 투표로 선출하는 민선고문으로 고문회의를 구성하고 행정 협조체제를 만들었다.

군정하에서 일본인 관리의 자리에 한국인을 채용하여 일제시의 제도를 점차 수정해 적용하였고 한국인이 요직에 등용되기 시작하면서, 행정 책임자는 미군이고 한국인은 행정 보조기능을 담당하였다. 이듬해 1946년 8월 31일 미군사령관은 군정청의 각 부장을 한국인으로 대치하고 미국인을 고문으로 바꾸어 고문정치를 시작하였고 이 때부터 형식적이거나 군정하에서 한국인의 자치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것이 지방에 까지 적용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려 실제로 대구에는 그 이듬해인 1947년 3월 17일 지방행정권이 한국인에게 이양되었고 이로부터 미군은 한국인의 배후로 물러나게 되었다.

이후로 군정은 한국인을 앞세운 고문정치를 시작하였고 이와함께 입법위원을 선출하여 일부 의회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입법위원은 미군정 하에서 정치 경제 사회개혁의 기초가 될 법령안을 작성하여 군정장관에게 제출하면 군정장관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입법위원의 수는 90명으로 하여 그 중 45명은 관선, 나머지 45명은 민선으로 하도록

구성하였다. 경상북도의 입법위원은 7명이었는데 1명의 도대표와 4~5개 군을 한 구역으로 하는 6개 구역에서 1명씩 대표가 선출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실시된 단계식 보통선거에 의하여 입법위원이 선출된 것은 10·1사건으로 어수선했던 1946년 10월 하순이었다. 이때 道代表 입법위원은 徐相日, 대구를 포함하는 제1구에는 尹洪烈이 선출되어 立法議院은 그 해 12월 12일에 개원되었다.

1946년 9월말에는 부산에서 철도국 노조 파업이 일어나고 대구에서는 철도노조가 중심이 된 쟁의가 발생하였다. 이는 좌익세력의 배후조종으로 시작하여 파업으로 연결된 사건이었다.

그 당시 좌익계열은 해방후의 혼란한 틈으로 막대한 동조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주장하는 바 신탁통치가 좌절 되었으므로 파업을 통한 세력의 확립을 기도하였다. 이들 파업투쟁은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밖에 없었고 그 충돌은 급기야 10·1사건으로 나타나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었다.

10·1사건에 관하여서는 뒤에 별도의 항목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상술할 필요가 없지만, 사건의 내용은 10월 1일에 경찰과 노동평의회 사이의 마찰로 시작되어 10월 2일에 1만여명의 노동자와 학생이 경찰을 무장해제하고 폭도화하여 일으킨 대구에서의 무력폭동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군정 당국이 계엄령을 발포하여 짧은 시간내에 진압한 것이긴 했으나 대구에서만 사망자가 27명, 부상자가 61명, 건물파괴가 156건이나 되는 막심한 피해를 내고 전국적 사회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

대구에서 일어난 10·1폭동사건은 계속해서 경북의 여러 지방으로 파급되었고 그 영향은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피해가 심했던 영천의 경우에는 사망자 64명 부상자 49명 건물전소 10건 건물파괴 87건이나 되었다. 10월 20일경에는 서울지역으로 파급되어 서울에 비상경계령이 내려지고 10월 30일에는 전남까지 소요가 파급되므로써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10·1사건의 소요파급으로 혼란했던 전국의 치안질서가 평온을 찾은 것은 11월 중순이었다.

이는 사상적 혼란 속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건으로 이후 좌우익의 피비린내 나는 살해과정을 거쳐 지금도 우리 민족사의 아픔으로 새겨져 남아있다.

이 사건 이후로도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재개된 1947년 5월부터 동위원회가 완전히 결렬되는 9월까지 좌익계의 활동은 계속적으로 크게 일어나고 있었고 특히 7월 27일 달성공원에서 개최된 「미·소공동위원회 속개촉하 및 임시정부수립촉진 쉼기대회」는 좌익계가 추진한 대규모 집회였다.

第2節 第一·第二共和國 時期

I. 政府樹立과 大邱 情勢

1947년 2월 安在鴻이 民政長官으로 임명되면서 한국인이 행정의 전면에 나서고 미군은 고문으로 2선에 물러나 있게 되는 시기, 특히 1947년 6월부터 48년 6월까지를 ‘남조선 과도정부’라 부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정시기에는 좌익과 우익의 사상적 갈등으로 심한 진통을 겪고 있었고 좌·우익 외에 중도와 정당까지 난립하여 혼란을 거듭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당의 난립 외에도 좌익계의 공작에 의한 소요 사태가 빈발하여 사회를 더욱 혼란 속으로 몰아 넣었다. 당시 상황을 보면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한국문제는 유엔에서의 의안이 된 후에도 신탁통치의 찬반으로 대립하던 좌·우익이 소련의 비호 속에서 북반부는 폐쇄된 채 남한에서만 좌익의 준동 속에 일대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1948년 2월 7일, 대구시내에서는 직장의 파업이 선풍적으로 일어나고 학교는 동맹휴업 사태가 연발하였다. 그 파문은 경북도내 전역에 미쳐 경찰서를 습격하고 무기를 약탈, 살상을 서슴치 않는 등 소란이 일어났다. 대구 인근의 성주, 선산, 칠곡, 경산, 청도 등지에서는 경찰서나 지서가 습격 당하고 인명이 살상되며 방화, 파괴 등 인적 물적 피해가 수없이 일어났다. 이러한 가운데 유엔총회에서는 총선을 통하여 한국에 독립정부를 세울 것을 가결하였고 유엔한국위원단으로 하여금 준비가 추진되고 있었다.

3월부터는 5월 10일에 총선을 치르도록 선거 준비가 시작되었다. 이 무렵 대구에 있던 주요한 정치단체는 국민회, 한국민주당, 한국독립당, 독립노동당, 근민당, 민주독립당, 여자국민당, 민족청년단, 대동청년단, 건국청년회 등이었고 좌익단체는 지하로 자취를 감추었다.

이때 서울에서는 한독당을 이끄는 金九가 남한 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남북협상운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었다. 대구에 지부를 둔 단체 가운데에도 근민당, 민주독립당, 건국청년회 등은 남한 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남북협상을 지지하였다.

5월 선거가 임박하자 대구시내에서는 남한 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시위가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대학생·중학생·국민학교 교사까지 가담한 휴업사태가 일어나기도 하였으나 투표소의 삼엄한 경계속에 5·10총선거가 무사히 치루어지게 되었다. 대구는 갑구·을구·병구의 3개 선거구로 나누어져 한민당 소속의 崔允東·徐相日·白南探가 초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5월 31일 제헌국회가 개원식을 거행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기초를 만들게 되었는데

대구출신 서상일은 제헌국회에서 헌법기초위원장이 되어 막중한 역사적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총선 실시 이후에도 남로당계의 지하공작과 선동으로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반대하는 산발적인 시위가 나타났는데 6월 8일 오후에는 대구시내 계산동, 봉산동, 대봉동, 덕산동 등 대구 중심가에서 시위군중들이 '인민공화국수립만세'를 외치기도 하였다. 이렇듯 좌우익의 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이 추진되어 7월 12일 국회에서 헌법이 통과되고 8월 15일 정부수립을 내외에 선포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탄생하였다.

해방후 3년만에 독립정부를 수립하였으나 북쪽은 소련의 영향하에 좌익 영역으로 버려둔 채 국토가 양분된 남한만의 불완전한 건국이었다. 이러한 불완전한 독립이었기 때문에 좌우익의 사상적 갈등은 그칠줄을 모르고 계속되었다. 좌우익의 사상적 갈등은 국방군 내에서도 계속되었다. 우리나라의 軍은 1946년 1월 「남조선국방경비대」로 출발하여 독립이 선포된 후인 1948년 9월에는 육군으로 개편되었으나 군 내부에 좌익세력이 존재하여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빈발하였다.

제주도 폭동 진압차 출동한 국군 일부가 여수·순천지구에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 10월 20일이었는데 대구에 주둔한 제6연대의 일부는 여기에 출동하고 잔류병력 수백명이 11월 2일 무장반란을 일으켰다. 무장반란군은 3명의 장교를 사살하고 3방향으로 나뉘어 시내 중심부와 달성공원, 그리고 신천동 방향으로 쳐들어 갔다. 대구를 장악하려던 기세였으나 경찰과 충돌하고 미군이 출동하여 일부는 체포되고 일부는 팔공산 등 산악지대로 숨어들었다.

이 사건은 경찰관 4명, 학생 5명 등 20여명의 인명 희생과 수많은 상해자를 내고 곧 진압되었으나 사회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서울에서 약 250명의 경찰 지원부대가 도착하고 대구시내 우익 청년단체가 자위단을 조직하여 이에 대비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의 주모자로 판명된 6명은 처형되었고 11월 30일 국가보안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남조선 노동당은 제약을 받게 되어 이후 지하 조직으로 숨었다. 이 사건은 단시일에 걸쳐 진압은 하였으나 산속으로 숨어서 활동하는 세력이 생겨나고 밤마다 야음을 타서 도시에 나타나 준동하는 예가 심해져서 민심은 불안에 떨고 있었다.

그러나 강력한 좌익세력의 색출과 배제로 점차 갈등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1949년 10월에는 과거 좌익계열에 적극 참여하였다가 전향한 인사들로 「國民報導聯盟」을 조직하였다. 지도위원에는 검찰, 경찰, 법관 등의 인사가 참여하여 전향한 인사들을

지도감독하고 대국민 계도를 도모하였으나 50년 6·25의 발발 이후 거의 희생됨으로써 동란의 직접적 피해와 함께 민족의 비극으로 기억되어 있다.

이무렵 해방 당시의 국민 감정상 부득이한 법률로 1948년 9월 22일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어 공포되었는데 이에 따라 反民族行爲特別調查委員會가 구성되었으나 반민특위의 본래 목적보다는 정권의 확보와 유지에 혈안이 되어 있던 李承晩 정권의 비협조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반민법이 공포된 이듬해 2월 경북특위가 구성되었고 위원장에 鄭雲駟, 위원에 宋稔度·方漢相·李龍魯·權啓煥이 임명되었다. 동성로에 있는 대구지법 소년부지원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영장이 발부된 것이 30건에 18건이 조사완료 되었다 하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민족정기를 바로 잡는 것보다는 더욱 시급한 것이 정권의 확보였기 때문에 민족분열을 조장한다는 반론에 밀려 버리고 말았다.

해방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2대 과제는 좌우익의 사상 갈등에서 좌익을 제거하는 일이었다고 이에 못지 않은 반민족행위자의 철저한 색출과 제거였음에도, 후자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그후 현대에 이르기 까지 민족정기의 확고한 기반확립과 정통성 시비에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 국제연합(UN)과 우방으로 부터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승인됨으로써 국가기반을 마련하고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였다. 대구시는 3개 선거구로 나뉘어 실시되었는데 甲區는 17명, 乙區는 7명, 丙區는 19명이 출마하는 난립상 속에 갑구에 趙瓊奎, 을구에 朴性夏, 병구에 李甲成이 당선되었다. 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6·25남침으로 한반도는 역사적인 비극의 전장이 되고말았다.

II. 6·25동란시의 大邱

소련을 배경으로한 북쪽정권의 남침은 아무런 대비태세도 없이 정치적 혼란만 거듭하던 대한민국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6월 25일 새벽에 총공세로 침략을 감행한 공산군은 3일만인 6월 28일 서울을 탈취할 정도로 우리의 방어선은 쉽게 무너졌으니 남북의 군비 비교에서도 엄청난 차이는 있었지만 국방의 태세는 전혀 갖추어진 바 없었던 것이다. 7월 1일 유엔군이 참전하여 공산권 대 자유진영의 세계전의 양상을 띠면서 정부는 7월 8일에야 겨우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고 정부는 전쟁에 밀려 이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는 대전을 거쳐 7월 16일 대구로 이동한 幕府 신세가 되었다. 대구시내 각급학교를

비롯한 여러 시설은 군기관에 전용되었고 북쪽으로 부터 밀려오는 피난민의 유입으로 빈터나 유희지 뿐만아니라 개인의 주택, 공공시설은 물론이고 심지어 도로까지도 점유되는 폭발위험에 직면하다할 만큼의 상태가 되었다. 병력의 충원을 위하여 도로 곳곳에서는 청장년들의 강제징집을 위하여 가두 검문을 실시하고 용감한 애국청년들은 입대를 자원하는 광경도 흔히 볼 수 있었다.

7월 21일 계성중학교 운동장에서 침략을 규탄하는 궐기대회가 열리고 27일에는 문화극장에서 임시국회가 소집되었다. 각 동별로 자위대가 조직되고 학도호국단에서는 학도의용군을 편성하여 속속 전투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전세는 계속 불리한 입장에 있었고 왜관, 군위 영천이 점령당하자 대구위기설이 나돌기 시작하였다. 당시 내무부장관 趙炳玉의 大邱를 死守한다는 주장과 8월 중순 유엔군의 대대적인 반격작전이 시민들에게 용기를 주었으나 군위방면에서 침공해오는 적군에게 팔공산까지 탈취당하고 적군의 박격포탄 3발이 태평로 2가 판자촌에 떨어져 대구가 위태롭게 되자 정부는 다시 부산으로 이동을 시작하였고 대구시는 소개령이 내려졌으나 곧 취소되어 적의 침입을 모면하였다.

대구는 결국 한달 남짓 전란에 의한 임시수도였던 셈이다. 일단 대구시민은 피난길은 모면하였고 피난민이 몰려들어 북적거리는 가운데 대구시는 민족의 정신무장, 양식절약, 생활의 간소화를 호소하는 戰時國民生活要綱을 발표하였다. 낙동강 방어의 성공으로 대구는 전쟁의 화력에 의한 피해는 없었으나 전쟁의 영향은 클 수 밖에 없었다. 피난민의 증가로 인구가 격증하였고 다시 1·4후퇴로 북한지방의 피난민이 추가되어 도시의 변두리는 물론 도심지 내의 도로까지 점유하여 판자촌을 형성하였는데 실례로 대구시청에서 남쪽으로 뻗은 삼덕동 도로는 60년대 초기까지 피난민의 판자집으로 점유되어 있었다.

1952년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되어 대구시에도 4월 25일 시의원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당시 대구시의원은 정수가 6개 선거구에 29명이었고 의장에 金正僞, 부의장에 崔正福이 선출되었다. 최초의 시의회 구성 후 간접선거에 의하여 李浩錫이 시장으로 선출되었고 의회의 불신임결의에 의하여 5개월만에 金鍾煥으로 바뀌었다. 이어 5월 10일에는 도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총원 61명중 대구에서는 3개 선거구에 6명이 선출되었다.

2)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공포된 지방자치법이 동년 12월 12일에 개정되고 이듬해 12월에 지방선거가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6·25동란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지연되었다.

III. 休戰協定 以後의 大邱 情勢

북의 남침으로 인한 남북전쟁이 양측의 심한 피해에도 승산이 없음을 인지한 공산측은 휴전을 제기하게 되었다. 당시 상황이 소련군의 지원에 중공군의 참전에도 승기를 잡지 못한 데다가 한국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미국측의 결의에다 40여 유엔회원국의 참전과 원조가 있었으므로 침략의도를 성공시킬 수 없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휴전회담은 유엔군측의 미군과 공산측의 인민군의 대좌로 되어 남한 국민의 북진통일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53년 7월 29일 휴전협정이 성립되었다.

휴전회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포로교환이었는데 포로는 중립국 송환위원회를 통하여 송환하는 데에 합의함으로써 국민의 의도가 반영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미 벌어진 전쟁에서 국군의 단독 북진으로라도 통일을 달성하자는 것이 우리 민족의 요구였다. 대구시내에서는 전시연합대학과 경북대학, 대구대학, 청구대학, 효성여자대학 등 대학생들이 공동으로 휴전 반대와 반공포로석방 환영대회를 연일 개최하였다. 그러나 휴전협정이 성립되므로써 북위 38도선이었던 남북의 경계선은 휴전선으로 대치되었고 또다시 남한만의 이승만 독재정권을 유지하게 되었다.

휴전후 한국정부는 공산침략의 재발에 대비하여 국가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한·미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국군을 정비 강화하고 전국에 민병대를 조직하였다. 이에 따라 대구에는 17세부터 37세의 장정으로 21개의 민병대를 조직하였다. 여기에 조직된 인원은 2만 4천여명에 이르렀고 1년간 90시간의 훈련과 180시간의 학과교육을 실시하였다.

휴전협정의 성립으로 전쟁이 멈추자 자유당정권은 이승만 단일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하여 族靑系(李範奭을 중심으로 한 朝鮮民族靑年團계열)를 제거하고 李起鵬 체제로 전환해갔다. 54년 선거에서는 자유당과 민주국민당의 대결양상을 보였는데 집권당인 자유당의 노골적 관권개입이 시작되었다. 야당입후보자는 여당이나 정부에 대하여 부패와 불의를 맹렬히 공격하고 운동원들까지 테러를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였다. 실제로 당시 대구 을구 입후보자 趙炳玉의 운동원이 폭발물에 의한 피해를 입었고 병구 입후보자 金在權이 구속되었다.

당시의 자유당 독재정권은 관권을 이용하여 행정조직을 통해 군중을 동원하고 학생을 마구 동원하였다. 학생들이 학교별로 동원되는 예는 릴기대회와 같은 관제시위 뿐만아니었다. 정부 고관이나 실력자의 행차때에 가두에 도열하여 출영행사에 동원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대구매일신문의 주필 崔錫采의 필화사건에서 그러한 정황을 잘 보여준다. 이 사건은

1955년 9월 13일자 「학생을 정치도구로 삼지말라」는 사설에 불만을 품고 이튿날 오후 4시 괴한들이 곤봉과 햄머로 신문 발행시설을 마구 파괴하고 신문을 탈취해 간 테러사건으로 국회에서 정치문제가 되어 조사단이 파견되었는데 자유당에 의하여 ‘백주의 테러는 테러가 아니다’라는 기상천외의 용어까지 만들어졌다.

자유당 정부의 독재체제가 점차 강화되자 56년 정·부통령선거에서는 관권의 개입이 더욱 심해질 수 밖에 없었다. 이 당시 대구는 대표적 야당도시로서 국회의원은 야당이라야 당선될 수 있었고 “못살겠다 갈아보자”라는 선거구호로 야당인 민주당의 인기가 급상승할 때 대통령 후보 申翼熙의 수성천변(신천의 수성교 남쪽 강바닥) 강연에는 10만의 인파가 모였다. 이것은 대구에서의 초유의 인파였다. 이 선거에 자유당은 대통령후보 李承晚, 부통령후보 李起鵬을 내세웠고 민주당은 대통령후보 申翼熙, 부통령후보 張勉을 내세웠으나 유세 도중에서 신익희의 급서로 인하여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장 면이 당선되었다.

대구에서는 이 선거에서 부통령에 이기봉을 당선시키려는 관권개입에 대하여 부정선거를 막겠다는 야당의 저지 노력이 마찰하여 개표를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던 것인데 전국의 시선이 대구에 집중되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 사건의 발단은 시청의 휴지통에서 자유당에 기표한 투표용지가 발견되었기 때문이었다. 대구는 야당도시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지키며 주권투쟁을 벌여 자유당 독재에 대항하였다.

제2대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56년 8월 8일에 6개 선거구에 23명이 선출된 대구시의회와 8월 13일에 61명으로 구성된 경북도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대구시의 도의원은 9개 선거구에 9명이 선출되었다. 도의원 선거에서도 대구에서는 9명중 6명이 야당인 민주당이었고 무소속이 1명, 자유당이 2명으로 여당의 강력한 지원과 관권의 불법적 간섭과 작용에도 불구하고 야당세가 압도적이었다. 58년 5월에 실시된 제4대 국회의원 선거도 대구의 6개 선거구에서 민주당 4명, 무소속 2명을 배출하였고 58년 10월에 실시된 최초의 대구시장 직접선거에서도 민주당의 趙俊泳이 당선되었다.

휴전협정 이후 좁은 지역에다 부족한 시설에도 불구하고 피난민으로 인구는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었다. 주택은 거의 방마다 한 가구씩 세들어 사는 공동주택의 형태를 떨 수 밖에 없었음은 말할 것도 없고, 어느 곳이나 가릴 것 없이 틈만 있으면 판자집을 지어붙여 가구를 이루고 있었다. 식량문제는 해결방도가 없이 대구를 질식할 듯한 기아선상으로 몰고 가게되었고 심각한 연료문제는 피난민에 의하여 연탄 아궁이가 처음으로 보급됨으로써 연탄이 장작연료에 대치하게 되었다.

서문시장(큰 시장)을 중심으로 하던 대구의 시장 상권은 교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상권을 형성하였고 인구의 폭주로 인한 도시세의 팽창으로 자갈마당(현 달성네거리),염매시장, 남문시장, 칠성시장, 방천시장(현 수성교옆)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대구 유통시장에서의 경제권은 거의 고향을 잃고 대구에 정착한 피난민 세력이 장악하는 실정이었다.

이 시기에 대구의 교통수단은 승승이라고 하는 13~4인승 소형 좌석버스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1960년경의 통계에 9개사 326대가 운행되었고, 버스는 시영버스 67대와 경북여객 등 영업용 220대가 운행되고 있었다. 이 당시 버스노선은 대구역 광장에서 대봉동(현 봉덕시장 입구)까지, 서문시장 네거리에서 대구역을 거치거나 중앙공원을 거쳐 수성교(방천시장)까지, 서문시장에서 동촌까지 또는 범어동까지, 서문시장에서 경북대학 구내까지 등 단순하고 짧은 노선이었고 합승은 칠성동, 비산동, 남산동 등 좁은 소방도로를 누벼 확대되어 가는 대구의 도시교통의 기능을 감당하였다.

IV. 2·28과 4·19 學生義舉

1960년 제4대 대통령선거를 3월 15일로 확정된 다음 자유당 수뇌부는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불법선거를 획책하고 있었다. 이때 대통령 이승만은 노쇠하여 직접적인 정치활동이 어려운 데다가 ‘인의 帳幕’에 가려 民意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인의 장막’을 형성한 소수 여당 수뇌부와 이에 사주를 받은 행정부는 집권의 연장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여당이 염려한 것은 부통령이 야당인 데다가 다음 선거에서 또 부통령이 야당에서 선출되면 노쇠한 대통령의 유고시에 후계를 자유당이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갖은 모략을 획책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4대 민주당 대통령후보 趙炳玉이 신병치료차 미국에 갔다가 갑작스럽게 사망함으로써 자유당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政權確保의 가능성은 부통령 당선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與野 모두 부통령 선거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었다.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던 60년 2월 28일, 대구에서 민주당 선거유세가 실시되었다. 이날은 일요일이었는데 학생들을 등교시켜 유세장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자유당의 불법적인 지시가 내려지자 각급학교에서는 이 지시를 철저히 수행하였다. 바로전날인 토요일에는 자유당 유세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매 가구 1명씩을 강제 동원하였다.

이에 반발한 대구 시내 고등학교 학생들은 경북고 800여명의 시위를 필두로 대구고, 대구상고,

경북여고 등과 중학생까지 가세한 학생시위가 명덕네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것이 자유당 독재를 무너뜨린 「60년 학생의거」에 불을 붙였던 것이다.

자유당의 불법적 만행은 이 정도에 그치지 않고 투표를 조별로 공개하여 서로 감시하도록 하는 노골적 부정선거를 추진하였다. 그들이 획책한 투표방법을 보면 3인조 또는 5인조식 조편성을 통하여 조별로 함께 투표장에 들어가 기표상황을 상호공개한 후 투표함에 넣도록 한 방법, 40% 사전투표, 자유당 완장부대를 동원하여 유권자를 위협하고 야당참관인을 축출, 투표함 운송도중 바꿔치기, 개표시 환표방법 등 이루 헤아릴수 없이 다양한 방법의 부정선거였다.

독재에 대항한 학생시위는 2·28 대구학생의거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3월 초에는 서울, 대전, 수원, 부산 등지에서 여러번 일어났고 3월 15일, 선거 당일에는 마산에서 시위가 크게 일어났다. 그후 마산에서 참혹하게 살해된 金朱烈의 시체가 바다에 떠올라 발견됨으로써 선거에 불만을 가진 국민과 학생층을 흥분시켰고 18일 고려대학의 시위를 시작으로 일어난 4·19학생의거에 경찰이 발포함으로써 4월 26일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대구에서도 4월19일부터 26일까지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학생시위가 계속되었고 26일에는 경북대학교 교수단을 앞세운 가두시위가 있었다. 이 시위는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평화적인 것이었고 경찰이 무력으로 제지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날 許政과도정부가 수립되었다. 이 과도정부는 자유당 독재정권이 무너진 이후부터 다음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정국을 안정시키고 킬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오랜 독재정치에 쌓인 불만과 이에 투쟁으로 항거하던 기풍이 일반화되어 거의 집단적 의사표시는 시위로 나타남으로써 사회는 또다시 혼란된 상황을 맞을 수 밖에 없었다. 대구 시내 주요 기업체에서는 불법 해고된 노동자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가 잇다르고 대학 또는 중고등학교에서는 어용교직자 축출을 외치는 등 시위만능식 풍조가 나타났다.

그리고 초중등학교에서는 「교직원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어용단체인 대한교육연합회를 탈퇴하는 움직임을 나타내었고 군사혁명 이후 「교원노조」 관련자들이 교직에서 축출당하는 역사적 상처를 기록한 바 있다.

V. 民主黨 政權과 大邱

자유당정권이 무너진 후 國會는 내각책임제 헌법개정을 끝으로 해산하였고 과도정부에 의하여 7월 29일에 民議員과 參議員의 兩院制 國회 선거가 공고되었다. 수권정당으로서

제1야당인 민주당은 7·29총선거의 공천을 둘러싸고 신파와 구파로 분열하여 대립이 심각하였다. 민주당의 공식적인 공천 발표가 있자 이에 불만을 품은 당원들은 공천 없이 출마하는 예가 전국적으로 반수를 차지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무기력한 정당의 모습에 반발하여 새로운 혁신세력이 社會大衆黨으로 정치무대에 등장하였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인사도 대거 나타났다.

사회대중당은 보수정당에 대한 혁신정당으로서 대구에서는 서상일·최석채·양호민·김수한 등 참신한 인사가 참여하여 상당한 지지를 얻었고 오히려 민주당은 수권정당으로서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고 무소속 입후보자가 난립하였으나 선거결과는 민주당이 압승하였다. 민주당 절대다수의 원내 안정세력을 확보하였으나 공천과정에서 부터 시작된 신·구파의 대립은 선거후에는 더욱 심각하였으며 신정부의 권력안배를 놓고 민주·신민 양당으로 분열하여 민심을 잃고 정세는 불안하게 되었다.

대구에서는 6개 선거구에서 민주당 5명(서동진·임문석·조재천·조일환·장영모)과 사회대중당 1명(서상일)의 도합 6명이 당선되었다. 이 시기에는 정당이나 단체들이 우후죽순 처럼 생겨나 이합집산을 거듭하여 정국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은 더욱 심화되었고 집권당은 이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국민들은 정치의 부패와 경제적 빈곤으로 불안과 불신 속에 있었다. 사회의 무질서 속에서 시위와 급진적 개혁을 부르짖는 소리가 높았고 이 틈을 타서 좌익계열의 암약이 커진 것에 대처하여 데모규제법 및 반공특별법이 제안되었다. 이 때는 정치행정력이 부재한 시기로 이 두가지 법률에 대한 찬반양론이 격심하게 벌어져 사회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이 법률을 반대하는 부류는 사회대중당, 사회당, 통일사회당 등 사회 혁신계열 정당 및 단체들로서 대구에서는 경북노조협의회, 경북교원노조, 경북대 민통련 등이 참여하였다. 61년 3월 22일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2대 악법반대'시위가 일어나고 특히 야간의 횃불시위가 민심을 불안하게 하였다. 대구에서는 「2대 악법반대 공동투쟁위원회」가 주최하는 성토대회가 대구역 광장에서 개최되었고 '민주당 정권타도'를 외치는 가두시위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정부에서는 대구를 포함한 전국에 걸쳐 혁신계 주도세력의 검거에 나서 험악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 당시의 사회는 극도의 경제적 빈곤 속에 허덕이고 있었기 때문에 민심의 향방은 어떤 사회로든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데에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빈곤은 비단 대구의 상황만은 아니었으나 대구의 실정으로 보면 도시주변의 빈민층이 다른 지방에 비하여 매우 두터웠던

것으로 보인다. 61년 1월에는 대구시내 신천동 일대의 영세민들이 대구시청에 몰려가 소동을 일으킨 일이 있고 대구시 당국은 긴급 구호양곡을 방출하여 민심을 수습하고자 하였으나 국가적 경제빈곤 아래에서 이것은 임시 방편일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절망적 상태에서 농민봉기설, 4월위기설이 나돌기 시작하였는데 ‘보릿고개’라는 춘궁기는 고질적인 빈곤을 되풀이하는 국가적 고민이었다.

第3節 第三·第四共和國 時期

I. 5·16軍事政權과 大邱

민주당 정권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이 軍部에서는 일부 장교들에 의하여 군부내의 부패를 광정하고 자체정화를 이루려는 의견이 일어나 부패한 정치 사회의 혁명을 선언한 군사정권이 등장하였다. 1961년 5월 16일, 군사행동에 의하여 민주당정부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탈취함으로써 일단 무혈로 정권장악에 성공하였다. 5·16이 혁명인지 아닌지는 훗날 제3공화국의 역사적 의의를 밝히는 데에서 결정지어질 문제이지만 민주주의의 정치발전에 지장을 주었다는 견해도 있으나 우리나라의 후진성을 탈피할 기반을 마련한 것은 분명히 제3공화국이 이루어 낸 역사적 공적이었다.

5·16 군사행동이 서울에서 시작되던 날, 동원된 군은 ‘혁명군’으로 호칭되었다. 혁명모의는 대구에서 시작된 셈이고 대구는 5·16의 가장 중요한 거점이 되었다. 그 이유로 5·16 군사행동의 총지휘자 육군소장 朴正熙는 대구에 사령부를 둔 二軍의 부사령관이었고 그는 선산군을 고향으로 둔 대구사범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5월 중순, 정치적 혼란이 사회적 불안으로 연결되는 가운데 일부 학생층은 통일문제를 거론하여 남북한 학생회담을 추진하려 했고 대구에서는 민족자주통일경북연맹 주최로 이를 지지하는 궐기대회를 준비하는 등의 시위로 인해 사회분위기가 어수선하였다. 학생들은 ‘통일을 위해 북으로!’라는 구호가 인쇄된 전단을 뿌리기도 하였고 침묵 시가행진을 하며 시위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5월 16일 새벽 2시반경 서울의 혁명군사령부의 지휘에 따라 대구에서도 2군사령부 참모장인 육군소장 李周一을 중심으로 군사혁명이 추진되었다. 공병대를 주축으로

한 대구의 혁명군은 도청, 경찰관서, 방송국, 전화국 등 주요기관을 점령하였는데 대구에서의 인맥을 보면 공병대령 朴基錫, 통신대령 朴升圭, 공병중령 張東雲·金鎮國·徐相麟·任光燮 등과 통신 장교 다수가 협조하여 208건설공병대대, 133야전공병대대, 5관구공병시설대, 1중건공병대대, 75통신대대, 2군의장대 등을 동원하여 혁명군을 이끌어 갔다.

서울에서 혁명군이 중앙방송국을 접수한 후 새벽 5시에 6개조로 된 혁명공약을 발표하여 혁명과업 수행에 들어갔을 때 대구에서는 비상계엄 하에서 제5관구 사령관이 경북지구 계엄사령관이 되어 도지사실에서 집무를 시작하였고 1205공병단으로 경북치안을 담당하였다. 군사혁명 발발이 방송을 통하여 전해지자 시민들의 표정은 긴장되었지만 어수선하던 사회분위기 속에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던 계층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로 변화되어 갔다.

5월 19일 대구에서는 4·19세력인 四月革命同志會 등 여러 단체가 주도하는 군사혁명 지지궐기대회가 대구역 광장에서 개최되었는데 여기에 약 2만여 시민이 참가하였다. 이어 혁명정부는 舊惡一掃를 최초의 과제로 내걸고 폭력배 소탕, 부정공무원 척결, 범법행위자 색출 등을 서둘러 대구 시내에서 200여명을 검거하여 시민들의 기대를 모았다. 그리고 재건국민운동을 추진하면서 모든 공무원들은 간소복을 착용토록 하고 명찰을 패용하고 근무토록 하였으며 공문서 양식이나 사무실 좌석배치는 군대식을 준용하였다.

국가재건최고회의 의결에 따라 실시된 62년 12월 17일의 헌법개정국민투표로 民政이 실시되기는 하였으나 혁명주체세력에 의한 민주공화당이 창당되어 여당으로 등장함으로써 실질상 정치인에 의한 민정이 아니라 혁명주체의 군복을 벗은 것에 불과한 민정이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는 퇴보하였다는 평가를 하고 있으나 이 당시 기아선상에 허덕이던 경제적 도탄을 생각한다면 경제개발 5개년계획 등 발전적 기틀을 잡아 나간 것은 분명히 역사의 참신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1963년 10월 15일 선거에서 민주공화당의 朴正熙 후보가 민정당의 尹潽善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어 3공화정이 출발하였다. 집권당인 민주공화당은 국회에서의 안정세력 확보를 위하여 자립경제와 생활안정을 내세워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승리함으로써 국회 175명의 재적 가운데 110명을 가진 독점적 다수당이 되었다. 대구의 4개 선거구는 물론이고 경북도내 20석 가운데 19석을 민주공화당이 차지하였다.

그 후 민주공화당은 곧 한·일국교 정상화를 정책으로 추진하였고 이에 대한 반대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나 학생시위가 끊이지 않았으며 66년에는 월남파병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67년에 실시된 6대 대통령선거와 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민주공화당은 또다시 압승하였다. 이 때 대구에서는 신민당의 曹逸煥이 당선되어 민주공화당은 3명이 당선되었다.

대구에서의 제3공화국 시기는 도시기능의 확장이라는 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시기임에 틀림없다. 5·16이후 조국근대화외의 기치아래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외곽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어 동대구역의 신설, 간선도로 및 순환도로 개설, 제삼공단을 비롯한 검단·이현·성서 등의 공단 조성, 낙동강 상수도 확장 등 괄목할 만한 사업들이 완성되었다.

제3공화국이 우리역사상 최고의 업적을 남긴 것은 ‘새마을운동’일 것이다. 새마을운동은 朴正熙 대통령이 1970년 4월 22일 전국 지방장관회의에서 自助·自立 정신을 갖고 마을을 가꾸어 나가자고 제창한 데에서 비롯한다. 잘 살아 보자는 민족의 역사적 숙원을 ‘잘 살기운동’으로 승화시킨 새마을운동은 10년간의 발전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71~73년의 기간을 기반조성 단계로, 74~76년의 기간을 자조발전 단계로, 77~80년의 기간을 자립완성의 단계로 볼 수 있다.

1970년 10월 1일을 기하여 정부 주도의 정책으로 시행된 「새마을 가꾸기 사업」은 72년부터는 새마을정신 계발과 소득증대 사업을 포괄하는 운동으로 확대되어 ‘새마을운동’으로 정착되었다. 새마을운동은 농촌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대구에서는 대도시가 갖는 특수한 환경적 요인 때문에 농촌과 동시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가 그해 5월 전국새마을 소득증대추진대회에서 범민족적 약진운동으로 확인함에 따라 ‘도시 새마을운동’으로 추진하였다.

이에따라 대구에서의 새마을운동은 勤儉·節約과 隣保·協同으로 직장·지역·가정·학교 등 4개 분야별로 추진되었다.

II. 維新政治와 그 終末

70년대에 접어들어 중공이 U·N에 가입하고 자유중국이 탈퇴하는 등 냉전이 종식되고 국제정세가 변화하는 가운데 한반도에도 7·4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72년 10월 17일 대통령의 특별선언을 통하여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민족진영이 대동단결할 것을 촉구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함과 동시에 「10월유신」을 단행하였다. 十月維新으로 개정된 유신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하여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것이 골자로 되어 있었다.

유신정치 아래서의 분위기를 보면 유신헌법의 찬반투표에서 95.3%의 참여에 94.1%의 지지로 나타났고 대구의 투표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이것은 권력의 개입과 강제가 따르지 않고는 나타날 수 없는 수치임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유신헌법 체제하에서 독재에 반대하는 학생시위도 끊이지 않았으나 이의 대응은 철저한 억압이었다. 유신정치 말기인 1979년에는 4월말에 발생한 YH무역의 폐업계획과 이로 인한 女工들의 농성사건이 8월에 신민당사에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정치문제로 비화하게 되고 이것은 다시 신민당 총재 金泳三의원 除名으로 이어져 급기야 釜馬事態를 이르게 되었다.

치안부 발표에 의하면(동아일보 1979. 10. 18일자) 부산대·동아대생 3천여명이 16~17 연 이틀동안 도심에서 유신 철폐와 학원 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 道廳, 신문사, 방송국을 습격하여 기물을 파괴하고, 파출소 21개소와 경찰차량 18대를 파괴 방화하는 등의 폭동 사태로 400여명이 연행되고 600명이 부상하였다. 이로 인하여 부산시경 국장이 경질되고 18일 0시를 기하여 부산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20일 정오를 기하여 마산·창원에는 위수령이 선포되었다. 부마사태가 발생하기까지의 시국 상황은 민심이 정부를 떠난 것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 대표적 예로 당시 대정부투쟁에 앞장선 신민당의 金泳三총재는 부산지구 수해시찰에서 이와같이 공언한 바 있다.

학생의 시위 상황을 보면 9월3일에는 강원대학생 800여명이 ‘긴급조치 해제 및 유신헌법 철폐’를 주장하는 시위농성으로 6명이 구속되었다. 또 대구에서는 9월 4일 계명대학생 1,500여명이 ‘이 어두운 역사의 조타수가 되지 못한다면’이라는 선언문을 낭독하고 가두로 진출하였고 이에 합세하여 경북대와 영남대학생 천여명이 유신철폐를 요구하는 선언문을 낭독함으로써 「경북학생협의회 구국선언문」 사건으로 7명이 구속되었다. 또 서울에서는 11일에 서울대생 1,500여명이 「민족민주선언」「학원민주선언」「경제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시위를 벌여 5명이 구속되었고 18일에는 고려대와 경희대의 시위에서 4명구속, 20일에는 서울대생 시위에서 4명구속, 27일과 28일에는 연세대와 고려대의 시위가 잇달았다.

유신정치는 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金載圭에 의한 朴正熙 대통령 시해사건으로 종식되고 崔圭夏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27일 오전 4시를 기하여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하였다. 전국의 모든 대학은 휴교령이 내려져 10·26사태이후 11월 19일까지 한달 동안 문을 닫은 가운데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서 ‘군은 국토방위의 임무에 조속한 복귀’를 천명하였고 11월 20일부터 다시 문을 연 대학들에서는 학원 자율화의 움직임이 조심스럽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12월 12일, 10·26사건의 합동수사본부장 손두환 소장을 중심으로 한 「12·12사태」로 상황이 급변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崔圭夏 대통령권한대행이 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그리고 80년 9월 1일, 대통령의 사임에 따른 선거에서 12대 손두환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이 기간동안 전국적으로 학생시위는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났다.

崔圭夏 대통령 정부의 문교부장관金玉吉의 학도호국단 해체와 교육민주화 정책은 대학에 참신한 기풍을 불어넣었으나 한편 학생들의 시대적 불만에 불붙인 결과가 되었다.

80년 3월, 신학기를 맞이하면서 大學街는 자율화 물결로 진통을 앓기 시작하였다. 어용교수 퇴진요구와 사립대학의 부정이 주된 주장이었는데 총장실을 난입하여 기물을 파괴하는 행위가 명지대, 중앙대, 세종대 등 족벌에 의하여 운영되던 사립대학에서 일어났고 이러한 힘은 곧 민주화의 시국운동으로 연결되었다. 4월 경북대학교에서는 사범대학 건물 내부에 조각되어 있던 朴正熙 大統領 彫像 훼손사건이 발생하여 해당 학생 2명이 구속되고 이는 곧 학내 학생시위로 이어져 학원 사태는 심각한 양상을 띄게 되었다.

5월에 접어들자 전국의 대학가는 더욱 술렁거리기 시작하였다. 5월 1일, 충남대생 1천여명이 시위에 나서고 2일에는 서울대생 1만여명이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며 민주화총회를 개최하는 등 시위가 격렬해지자 외국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숙명여대, 동국대 등 교수의 시국선언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13일 밤 9시경 연세대생들이 주축이 된 서울 시내 6개 대학 2천5백여 학생들이 세종로 일대에서 ‘계엄철폐’를 부르짖으며 야간시위를 벌였고 14일에는 서울 시내 21개 대학에서 한때 7만명이 넘는 대학생과 지방의 11개 대학생 3만여명이 거리로 나와 시국을 성토했는 시위를 벌였다. 이 학생시위는 15일에도 계속되었고 일부 과격해진 시위대는 시내버스를 탈취 경찰 저지선을 뚫기도 하고 가스차를 불태우는 등 확산되고 있었다.

대구에서도 경북대학교를 비롯한 각 대학에서 학내시위가 계속되었고 5월14일에는 영남대학교 학생 1만여명이 오전11시 경산캠퍼스를 나와 ‘계엄령 철폐’ 등 구호를 외치며 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구캠퍼스(의과대학)까지 18km를 도보로 4시간 반에 걸친 시위를 벌였다. 경북대학교 학생 2천여명은 오후 4시 경찰의 제지를 뚫고 시내 변화가 까지 진출하여 ‘계엄령 철폐’를 요구하고 경찰버스를 불태웠다. 계명대학교는 14일부터 무기휴학에 들어갔으나 1천여명의 학생들이 시내로 진출하였고 한사대학도 참여하였다.

16일부터는 전국 대학가는 대체로 평온을 찾았으나 이때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시행되어 오던 비상계엄을 17일 24시를 기하여 제주도를 포함시키므로써 비상계엄이 확대되고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시킴과 동시에 대학을 휴교조치하고 각 대학에는 장갑차를 배치한 군이 진주함

으로써 교육활동이 중지되었다. 전문대학을 제외한 대구의 각 대학에도 출입문은 계엄군에 의하여 통제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광주지역에는 이른바 「광주사태」로 무정부상태에 까지 이르렀으나 그 실상은 훗날 역사에서 밝혀질 일이다.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시위에 대응한 정부의 지원은 지역적 불만을 해소시키려는 노력으로도 나타났으나 정작 권력자의 본고장이었던 대구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토목, 건설 등의 시설이나 문화적 조건이 낙후된 도시로 심한 천대를 받은 셈인데 대구의 정부투자 지원은 다른 지방에 비하면 눈에 띄게 저조하였다. 대구시의 사정을 보면 유신정치기인 70년대에는 도시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앞산공원을 비롯하여 망우·달성·두류·중앙공원 등 녹지공간의 확충과 낙동강 상수도 2차사업을 시행하는 정도에 그쳤고, 겨우 시영아파트·태평2지구·북현·내당·산격아파트 등의 아파트를 건립하여 늦게나마 대구에도 아파트시대를 예고하였다. 또한 상공업과 유통업을 현대화 시키기 위한 「시장 현대화 계획」에 따라 서문시장·남문시장·봉덕시장·대명시장·동부시장·원대시장·영선시장 등을 70년대에 차례로 현대화 시키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第2章 大邱直轄市 時代

第1節 直轄市 昇格

대구의 직할시 승격문제는 70년대 전반기 부터 거론되어 온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으나 해결되지 못하다가 결국 대구출신 全斗煥대통령 집권시기에 해결을 보게되었다. 구체적으로 5공 초기인 1981년 4월 13일에 제정공포 된 「대구시 정부직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7월 1일자로 승격되었다. 인구 규모에 비하여 도시가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직할시가 되면 도시재정의 자립에 의하여 도시가 시설면에서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직할시의 승격은 축제분위기로 연결되었다.

1980년 민주화의 물결을 잠재운 5공의 출범은 물가의 안정이나 경제적 성장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며 민주화를 요구하는 정치적 의식면에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밖에 없는 양면성을 지닌다. 그 7년간의 업적은 88올림픽의 유치와 같은 민족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준 결과에서 더욱 긍정적 평가를 받게된다. 그런데 5공의 마지막 해인 1987년은 각종 정치적, 사회적 혼란과 극심한 노사분규로 말미암아 민심이 극도로 불안한 시기였다. 당시의 불안은 제1야당인 신민당이 87년 1월 경찰고문으로 희생된 박종철 치사사건으로 들끓고 있던 학생시위 세력과 연계된 반정부투쟁을 벌이는 상황인 데다가 4월에는 신민당이 분열되어 통일민주당이 창당되는 정치적 혼란도 가중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에서도 학생들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로 거의 수업이 희생되었고 생산공장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 물결을 타고 연일 파업투쟁을 벌여 생산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되었다. 국가적으로는 1년 앞으로 박두한 올림픽 준비에 여념이 없을 때 반정부투쟁을 벌이는 세력의 구호는 올림픽 개최를 반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올림픽으로 인한 경제적 적자가 국가를 파탄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대구출신의 盧泰愚대통령의 6공 5년간은 「6·29민주화 선언」으로 부터 문민정부의 탄생을 현실화한 과도적 성격에서 나름대로의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물가의 양등, 특히 부동산의 가격과 인건비의 폭등은 민심을 정부로부터 외면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 현 시점에서 대구직할시 시대에 대한 고찰은 5공과 6공의 12년간에 걸친다.

직할시 승격당시 대구의 인구는 1,838,037명으로 (남자 902,942명 여자 935,095명) 남 : 여의

비율은 100 : 103.6이었다. 이 인구 구성 비율은 대구의 인구가 2,288,441명이 되는 1989년 이후는 거의 같은 비율을 나타내게 된다. 인구 100만 이상을 직할시 대상으로 하고 있었음에도 180만 이상의 인수로 성장할 때까지 직할시가 되지 못한것은 대구의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준 결과를 낳았다. 家口數로 보면 81년에 415,220가구에 가구당 인구 4.43명이던것이 90년에는 596,701가구에 가구당 인구 3.74명으로 10년동안 家口는 43.7%가 늘어났다.

직할시 승격과 더불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은 상수도과 주택문제였다. 대구시는 우선적으로 2000년을 목표로 한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로·교통, 주택, 상·하수도, 환경녹지 등 분야별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였다. 미국의 동남부 도시인 아틀란타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대구시 문화상을 제정하는 등 직할시로서의 문화적 위상을 높여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82~86년의 제1차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동산동, 덕산동, 태평1가 등 11개지구의 재개발이 이루어졌다. 82년부터는 「푸른 대구 가꾸기」 5개년 계획에 따라 1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83년에는 도로, 지하도 등 교통시설이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도로포장에 있어서도 1981년 당시에는 포장률이 48%에 미달하였으나 직할시 승격이후 활발히 추진되어 90년말 현재로 85%로 향상되었다.

그리고 대구를 남북으로 갈라놓은 철도에 막혀 도시발전이 큰 장애를 받아왔으나 평리 지하도와 칠성지하도를 건설함으로써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¹⁾ 그러나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대구의 모습은 84년 10월에 개최된 제65회 전국체육대회를 기하여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65회 전국체전은 86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것이었기 때문에 주요 경기장 시설을 신축 보강하였고 주변 환경 정비에 주력하게 되었던 것이다.

대구직할시의 가장 우선적 추진 사업인 상수도문제를 보면 직할시 승격 당시인 1981년의 1인당 1일 급수량은 209리터로, 10년후인 1990년의 385리터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 때에는 수도의 보급률도 미흡한 데에다 높은 지대는 격일제 급수가 잦았고 낮은 지대에도 기후조건에 따라 제한급수와 격일제로 공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이 개선되기 시작한 것은 82년 9월에 완공한 공산수원지 사업을 시작으로 낙동강 3·4차확장 사업, 염색공단 설립이후의 전용 공업용수 개발, 가창댐 확장사업 등이 계속적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이다. 적어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1인당 1일 급수량을 500리터

1) 태평지하도(시민운동장 입구)와 동인지하도(칠성시장 입구)는 1960년 대구시 자체 건설로 해결되었으나 철로는 대구시를 남북으로 갈라 발전을 저해한 지장물이었다.

까지 끌어올려야 하므로 이것이 대구직할시의 과제이나 운문댐 완공과 낙동강 취수 확장사업으로 해결하도록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주택문제는 인간 생활의 안정을 위한 기본문제이나 대구의 주택보급률은 53~4%에 미치지 못하여 전국의 도시 가운데 가장 낙후된 도시중의 하나였으나 90년에는 63%에 도달하여 상향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주택문제는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개량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시의 인구집중 현상으로 나타나는 인구증가와 함께 보급률을 향상시키는 데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주택 보급률의 상향요인은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의 확대 보급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대구시의 주택유형의 변천을 연도별로 보면 1970년까지는 독립가옥(단독주택)이 4만여호로 95%를 차지하고 공동주택이 5%인 2천여호에 불과하였으나 직할시로 승격무렵인 80년~81년에는 84~90%를 공동주택으로 건설하고 단독주택의 건설은 16%에 미달하였다. 이로 미루어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대구의 보수적 주거경향은 상당한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보급률의 향상은 85년부터 88년까지 청구·우방 등 주택건설회사의 활발한 사업으로 주택건설 90%이상을 민간부문에서 독점 공급함으로써 크게 이바지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는 주택보급률이 60%를 미달하는 시점에서 전용면적 60평이상 80평에 이르는 대형 아파트를 건축함으로써 빈부의 격차를 더욱 노골화 시키고 주택보급률을 저조하게 하는 원인을 만들었다.

무주택근로자와 도시 영세민을 위한 주택의 공급은 대구시와 주택공사 등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자가 거의 같은 비율로 참여하였다. 직할시 승격후 약 10년간 대구시에서 건설한 시영주택은 모두 소형아파트로 7평형으로부터 20평형 정도의 서민용인데 분양아파트 5,000여세대, 임대아파트 8,200여세대로 나타나 있다. 이것도 89-90년에 집중적으로 건설되어 대구시의 서민 복지대책이 적어도 5공말기인 88년까지는 능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구시의 건축형태는 60년대까지는 지방 거점도시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7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시내 중심부의 호텔·아파트 등이 고층화되면서 80년대 초까지 건축붐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그리고 80년대 중반 신개발지의 도시주변에 고층 아파트군이 건축되었으나 실제적으로 도심의 업무시설 중심의 도시형 건축은 88올림픽이 개최된 때로부터 도심에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90년대에 들어와서 초고층의 철골 구조물이 건축되고 있다.

대구의 교통상황은 지상교통에만 의존하고 있어 경제 성장에 비하여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자가용 승용차가 폭주하여 90년대에 들어와서는 극심한 차량체증으로 인한 출퇴근 시간의 시내 주행속도가 시속 20km까지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85년에 착공하여 92년에 준공한 신천대로는 그나마 남북간의 교통난을 완화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신천대로는 대구의 남북간 소통에 유일한 대동맥이나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 걸쳐 지하철이 개통되면 대구의 지역별 생활권 기능이 큰 변화를 보이게 될 것이다.

第2節 産業·經濟의 發展

1881년 대구의 농가호수는 13,337가구로 전 가구의 3.2%를 차지하였으나 10년후의 통계는 6,857호로 1.15%를 차지하여 농업인구가 격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농업이라 하더라도 식량생산 농업에서 화훼원예, 축산농업 등의 기술농업의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경제수준의 향상은 특용작물과 과일, 육류 등의 소비를 증가시켜 놓았다. 쇠고기의 소비를 보면 1981년 대구시의 연간 소비량은 28,823마리였으나 90년에는 50,844마리로 76%가 증가하였고, 돼지고기는 81년 66,444마리에서 90년 296,836마리로 450%의 격증세를 보이고 있다.²⁾ 이것은 농림수산업은 감소하고 광공업은 증가하는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 상공업과 무역의 발전으로 소득이 증대된 때문이다.

대구권의 공업실태를 보면, 1960년대까지는 섬유공업을 중심으로 수입대체 공업화단계에 머물러 있었으나 1970년대에 포항의 종합제철과 구미의 전자공업단지가 생성되면서 공업이 고도화되고 대량수출단계로 진입하였다. 직할시 승격 10년의 변화를 볼 때 5인이상 공장수가 2,800여개에서 4,500여개로 62% 증가하였고 종업원수는 14만명에서 18만명으로 28% 증가하였으며 생산액은 1조8천억원에서 약 5조2천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³⁾ 제조업체를 규모별로 보면 종업원 300명 이상의 대기업은 47개 업체로, 299인 이하인 중소기업 4,780개 업체의 1%에 미달한다.

대구 공업은 1960년대를 전후하여 섬유직물공업 중심지가 되어 전국의 대구직물업 비중은 60%에 달하였다. 그러나 70년대 중반 이후로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변하여 중화학공업이

2) 대구직할시, 《直轄市政十年》, 1991. 제13장 제2절 農·畜産業, pp. 547~548.

3) 위의 책, 제13장 제3절 상공업 및 무역, pp. 551~565.

울산·포항·구미·여천 등지에 일어나면서 대구는 경공업 수출품 공급기지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직할시 승격이후 노동집약적 산업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둔화될 수 밖에 없었지만 섬유공업은 기계의 자동화를 통하여 완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고, 기계공업은 급격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화학공업이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액을 보면 섬유부문은 2,000여 업체에 종업원수 100,000여명, 생산액 2조3천억원이고, 금속·기계부문은 1,700여 업체에 종업원수 52,000여명, 생산액 2조7천억원으로 생산액에서는 섬유부문을 능가하였다. 이것은 섬유부문과 금속기계부문이 대구공업을 주도하는 업종으로 위치를 굳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르면 대구는 현재 국내의 선도적 섬유공업기지로 그 위치를 계속 유지해 가는 纖維尖端工業都市로서의 기능과 인근 중공업 단지의 부품공급을 담당하는 금속·기계공업이 발달하여 尖端機械輕工業都市로서의 기능을 갖게 될 것이다.

시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산업경제의 발달로 대구시내 전력 사용량은 81년 2백만 8천 MWH였던 것이 90년에는 4백2십만 3천MWH로 늘어나 1인당 전력 사용량으로 계산하면 1,092KWH에서 1,688KWH로 1.54배 증가하였다. 대구의 전력소비는 섬유업 등 산업용이 64%, 주택용이 22%, 업무용이 13%, 기타 1%의 구성비를 이루고 있다. 가구수의 증가로 81년 220,000여호의 전력수용 호수도 10년후에는 390,000여호로 1.8배로 늘어났다. 전력의 시설면에서도 최근 10여년 동안 크게 개선되었다. 대구 도심의 환경을 개선하고 정전과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전주와 전선을 땅속으로 묻는 地中化 공사가 1984년부터 추진되어 왔다.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지중화공사는 송전선 뿐만아니라 배전선까지를 모두 지중화시킬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혁혁한 발전을 이룩한 분야의 하나는 電話(전기통신)라 말할 수 있다. 대구에 자동전화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61년 9월 3일 3,000회선의 개통으로 부터이다. 직할시 승격 당시에는 185,000회선을 수용하고 있었으나 10년 후에는 850,000회선으로 약 4.5배 증가하였고 93년에는 100만회선을 돌파하였다. 팩시밀리의 보급에 따라 유선전화의 수요는 계속확대 되고 있으며 이동통신의 발달로 생활환경은 급속도로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화 보급률(인구 100명당 전화대수)을 보면 1970년 2.6대, 80년 10.2대, 90년 30.6대로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다. 그리고 대구에서의 휴대용 전화는 88년부터 개통되어 4년만에 가입자 수가 10만명을 넘었는데 매년 증가율이 200%를 넘고 있다.

직할시 승격 당시 대구시내의 교통수단은 약 30여개 회사에서 운행하는 1,000여대의 버스와

4,000여대의 택시(일반택시 3,500여대와 개인택시 440여대)가 있었으나 10여년 후 교통수단의 다양화로 버스는 1,600여대로 증가하는 정도에 그치고 택시는 11,000여대(일반택시와 개인택시 각 50%)로 증가하였다. 시세의 증가에 따라 1969년 동대구역이 건설되었고 70년대 중반 부터는 동대구역이 대구의 중심역이 되었다.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대로 자동차의 등록 대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81년 직할시 승격 당시 38,000여대의 자동차는 91년에는 262,100 여대로 7배 가까이 급증하였는데 이 중에 승용차는 12,500여대에서 158,800여대로 12배 이상 늘어났다.⁴⁾

대구외의 항공수송은 1961년 부산비행장 대구출장소라 하여 국영항공의 DC-3소형 여객기가 취항한 것을 시작으로 69년 3월부터는 민간항공인 대한항공으로 바뀌고 70년 소규모의 여객청사를 개관하는 등 조금씩 변화의 모습을 보이다가 1980년 부터 보잉 727기를 취항시켜 대구-서울, 대구-제주간 2개 국내선에 1일 10회 왕복 운행하고 있다. 1989년 10월부터는 대한항공 외에 아시아나항공이 취항함으로써 민간항공의 경쟁시대로 접어들고 90년 여객청사를 확장하여 대구공항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第3節 教育·文化的 發展

대구직할시 승격후 10년간, 교육은 규모면에서 매우 큰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학교수를 보면 행정구역이 확장됨에 따라 증가한 것을 포함하여 81년에는 유치원 60, 국민학교 69,

4) 大邱市 車種別 自動車 現況과 展望(대구직할시, 《대구장기발전구상》 1993, p. 226참조)
(인구단위 천명; 臺當人口除外) (자동차단위 천대)

年度-區分	人 口	總 臺數	乘用車	택 시	버 스	기 타	臺當人口	승용1대당인구
1976	1,359.0	12.2	1.6	3.8	0.9	5.9	111.2	
1980	1,604.9	32.2	10.9	4.7	2.0	14.6	50.0	
1984	2,012.0	60.4	21.4	6.2	6.6	26.1	33.3	
1988	2,239.4	131.4	61.6	8.6	16.6	44.6	17.0	
1991	2,236.0	262.1	158.8	12.0	25.5	65.7	8.5	14.1
1996展望	2,655.7	377.2	227.9	13.2	43.8	92.3	7.0	11.7
2001展望	3,000.0	638.1	444.4	15.3	55.5	122.8	4.7	6.8
2006展望	3,200.0	845.4	609.5	17.4	65.1	153.4	3.8	5.3
2011展望	3,300.0	950.6	681.8	19.1	71.8	177.9	3.5	4.8

중학교 49, 고등학교 46교이던 것이 양적으로 팽창한 91년에는 유치원 164, 국민학교 121, 중학교 75, 고등학교 61개교로 증설되었다. (초·중·고등) 학생수를 비교해 보면 81년에는 424,999명이었고 91년에는 492,998명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국민학교 아동수의 변화인데 81년에 215,539명에서 90년에 255,071명으로 10년동안에 40,000여명이 늘어났으나 이를 고비로 91년부터는 매년 5,000명 이상씩 줄어들고 있다. 이 수치는 학급당 학생수가 47명인 현재, 대구시내 5,300여 학급에 평균 1명씩 줄어드는 셈이고 학급당 아동수를 줄이지 않고 있는 현재의 형편으로는 매년 100학급 이상씩 줄어들고 있다. 96년부터는 아동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다는 통계가 있으나 교사의 수업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

학급당 학생수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세계적 후진국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교육의 질과 수준을 학급당 인원으로 평가하기도 하는데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학급당 인원은 25명선에 가야하지만 우선 30명미만 까지만이라도 도달하는데는 1년에 평균 1명씩 줄여가도 20여년이 소요될 것이다. 대구시 학급당 학생수를 비교해보면 81년에 국민학교 58.8명, 중학교 67.4명, 고등학교 60명이던 것이 91년에 국민학교 47명, 중학교 50.6명, 고등학교 52명으로 되어 아직 더이상 줄이지 못하고 있다.⁵⁾ 교원수는 81년에 8,572명(국민학교 3,647명 중학교 2,127명 고등학교 2,798명)이었고 91년에는 14,567명(국민학교 5,865명 중학교 4,178명 고등학교 4,524명)이었다.

새로운 형태의 고급 아파트가 대단지를 형성해 감에 따라 80년대에 들어와서 시내 중심부의 중앙·대구·종로·수창·명덕·삼덕·동덕·동인·북명 등 중심부의 국민학교는 취학아동수가 줄어들고 있고 변두리의 신개발지역에 학교를 신설해 가는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복잡한 도시환경을 벗어나 좀더 넓고 쾌적한 공간을 찾아 이전하고 학교부지는 아파트 단지화 하는 대학교나 중·고등학교가 많이 나타났다. 70년대 초에 영남대학교가 대명동 부지로부터 경산으로 이전하고, 뒤이어 대구대학교(한사대)가 경산군으로 확장 이전하였으며 80년대에 효성여자대학교가 하양으로 이전하였다. 중등학교의 이전은 84년에 대구상고와 제일여상고의 이전을 시작으로 85년에는 경북고, 87년에 능인중고, 대륜중고, 89년 대건중고, 효성여중고, 영남중고, 90년 오성중고, 93년 성광중고 등 여러 공사립학교가 이전하였다.

고등교육기관으로는 2년제 내지 3년제의 전문대학교와 4년제 내지 6년제의 대학이 있는데 전문대학은 주로 간호, 보건, 공업 등의 기술인을 양성하여 지역사회 및 국가에 이바지하고

5) 앞의 책, pp. 707~732. 제16장 教育, 제 2절 초·중등교육.

있다. 이들 전문대학을 설립순으로 나열하면 동산간호전문대학·영남공업전문대학·대구전문대학·계명전문대학·대구보건전문대학·대구공업전문대학·영진전문대학·신일전문대학 등이 있고 이 밖에도 경산, 구미 등 대구권에는 전문대학이 많이 있다. 대학은 경북대학교를 비롯하여 영남대학교·계명대학교·대구대학교·효성여자대학교·경북산업대학교·대구교육대학교·대구가톨릭대학교·경산대학교 등이 대구시내에 있거나 대구와 인근지역에 캠퍼스를 나누어 갖고있어 대구는 교육도시로서의 기능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다.

대구를 문화도시라 칭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대구는 문화적으로 매우 빈약한 도시임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실상 대구에는 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부속박물관을 제외하고는 박물관도 하나 없는, 빈곤한 도시였기 때문이다. 마침 90년대에 들어와서 국립박물관 설립을 추진하여 94년 10월 개관 예정에 있으니 머지않아 한가지 문화적 구색은 갖추게 될 것 같다.

도서관은 1919년에 개관된 중앙도서관(대구시립 도서관)과 1972년 대구고등학교 부지 일부에 개관한 학생도서관이 전부였으나 81년 두류도서관, 82년 대봉도서관, 83년 북부도서관, 89년 효목도서관, 92년 서부도서관이 개관되었고 96년까지 동부도서관과 남부도서관이 건설될 계획으로 있다. 기타 사회교육 기관으로는 직할시 승격 당시와 비교할 때 30개소에 불과하던 인문계 학원이 230여개소로 폭발적 증가를 보이고 있고, 기술계 학원은 87개소에서 440개소로, 예능계는 127개소에서 484개소로, 사무계는 36개소에서 666개소로, 독서실은 90개소에서 324개소로 늘어났다.

대구의 예술단체는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藝總) 대구직할시지부를 중심으로 건축가협회·국악협회·무용협회·문인협회·미술협회·사진협회·연극협회·연예협회·영화협회·음악협회 등 10개 예술단체가 활약하고 있다. 대구시의 시립교향악단은 1964년에 창단되었으나 직할시 승격과 동시에 합창단·소년소녀합창단·무용단·국악단 등 시립예술단이 설립되어 매년 적게는 30여회에서 많게는 80여회에 이르도록 활발한 발표를 하고있다. 특히 교향악단의 활동이 가장 선도적이며 앞으로 劇團이 창단되면 그나마 시립예술단의 모습을 갖추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대구의 문학활동은 35개 문학동인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인협회에 가입된 회원수는 230명에 이른다. 문인협회는 시·시조·아동문학·희곡·소설·평론·수필 등 7개분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시분과는 인원수가 절반을 차지할 뿐만아니라 작품활동면에서도 가장 활발하다. 文學同人誌는 《竹筍》·《嶺南隨筆》·《文化批評》·《나래》·《展開》·《大邱隨筆》·

《大邱小說》·《嶺南兒童文學》 등이 있고 詩專門 季刊文藝誌로서 《詩와 反詩》가 전국 文壇의 주목을 받으며 대구문단을 빛내고 있다.

공연예술에 있어서는 직할시 승격후 각 예술단체별로 큰 활약을 하고 있으며 참여 예술인이나 활동영역도 매년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음악, 연극, 국악, 무용 등 장르별로 1982년에 「대구음악제」가, 85년에 「대구연극제」가, 90년 「국악제」가, 91년 「무용제」가 창설되어 단위예술체로서 매년 개최됨으로써 지역예술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가고있다. 전시예술에 있어서는 작품전시 활동이 1980년과 90년을 비교할 때 두배이상 성장하였다. 「大邱美術大展」은 비교적 알찬 작품과 창작활동으로 대구미술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 밖에도 지역적, 국제적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1985년에는 「韓中美術交流展」이, 86년에는 「嶺湖南美術交流展」이 창설되어 매년 개최됨으로써 지역간, 국제간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1982년부터는 지역의 종합 문화예술축전으로 「達句伐祝祭」가 82년에 시작되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 행사의 목적은 지역 공동체의식의 함양과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전승하는데 있으며 또 시민의 문화의식 제고하는 데에 있다. 이 밖에도 區를 자치단체로 하여 각 구청이 주관하는 區別祝祭를 개최하고 있으나 이것은 형식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고 뚜렷한 지역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문화시설에 있어서 직할시 승격까지 옥내 행사 시설로는 산격동 소재의 대구체육관(1975년 경상북도로부터 대구직할시로 이관)과 1972년에 착공하여 75년에 완공한 市民會館이 있었으나 90년에 준공된 달서구 성당동의 두류공원 내에 文化藝術會館이 더 큰 기능을 맡게 되었다.

대중문화 공연장은 70년대까지는 10여개의 大劇場(수백명 수용)이 전부였으나 80년대초 小劇場(수십명 수용)의 출현과 확산으로 극장가의 새로운 품물로 나타났다. 현재 대구시 내에는 대극장 12, 소극장 34, 연극관 2개소가 있으나 90년대에 접어들자 확산되던 소극장도 관객이 줄기 시작하였고 대중문화 양상이 변진하여 대중가요의 노래방으로 쏠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大邱市史編纂委員會

《編纂委員會》

委員長
副委員長
委員

曹海寧
金英夏
金權寧
金相徹
金潤榮
金宅坤
朴勝圭
朴英圭
朴容圭
徐贊基
孫錫琦
尹容鎮
李秉恂
李樹健
李海斗
崔龍浩
黃鍾東
申泰守
曹琪鉉
盧炳貞

市長
慶北大學校 名譽教授
前 曉星女子大學校 教授
慶北大學校 教授
嶺南大學校 教授
前 嶺南大學校 教授
嶺南大學校 教授
大邱文化放送局 常務理事
嶺南日報 論說主幹
慶北大學校 教授
嶺南日報 社史編纂室 執筆委員
慶北大學校 教授
慶北大學校 教授
嶺南大學校 教授
大邱大學校 教授
慶北大學校 教授
前 啓明大學校 教授
企劃管理室長
內務局長
文化體育課長

幹事

《關係公務員》

金丁奎
鄭時植
李碩吉
馬學夫

副市長
文化體育擔當官
文化財係長
行政主事

編輯委員會 與 執筆委員

《編輯委員會》

委員 長	金 英 夏	大邱市史編纂委員會 副委員長
委 員	尹 容 鎮	慶北大學校 教授
	金 相 榮	慶北大學校 教授
	崔 龍 浩	慶北大學校 教授
	朴 勝 偉	嶺南大學校 教授
	金 宅 圭	前 嶺南大學校 教授
幹 事	金 若 秀	大邱市史編纂委員會 研究員 (分科別順)

《執筆委員》

徐 贊 基	慶北大學校 教授(一篇 1章)
曹 華 龍	慶北大學校 教授(一篇 2·3·5章)
楊 辰 錫	慶北大學校 教授(一篇 4章)
尹 容 鎮	慶北大學校 教授(二篇 1·2·3章)
朱 甫 暉	慶北大學校 教授(二篇 4章 1·2節, 5章 1·2節)
李 泳 鎬	慶北大學校 講師(二篇 4章 3節, 5章 3節, 6章 4節)
金 昌 鎬	慶州大學校 教授(二篇 4章 4節, 5章 4節)
李 文 基	慶北大學校 教授(二篇 6章 1·2·3節)
柳 永 哲	嶺南大學校 講師(三篇 1章)
金 潤 坤	嶺南大學校 教授(三篇 2章)
南 仁 國	永進專門大學 教授(三篇 3章)
宋 春 永	大邱教育大學校 教授(三篇 4章 2·3節, 四篇 3章)
韓 春 基	尙州產業大學校 教授(三篇 4章 1·4·5節)
李 樹 健	嶺南大學校 教授(四篇 1章)
李 樹 煥	嶺南大學校 講師(四篇 2章)
金 容 晚	慶尙北道 學藝研究官(四篇 4章)
李 秉 然	慶北大學校 教授(五篇 1章, 4章 1節)
李 俊 九	慶山大學校 教授(五篇 2章)
張 東 翼	慶北大學校 教授(五篇 3章, 4章 2節)
禹 仁 秀	蔚山專門大學 教授(六篇 1章)
朱 雄 英	慶北大學校 講師(六篇 2章)
權 寧 培	金烏工科大學校 講師(六篇 3章)
河 宗 睦	韓國放送通信大學校 講師(六篇 4章)
鄭 灌 東	大邱教育大學校 教授(六篇 5章, 七篇 1·2章)
黃 鍾 東	前 啓明大學校 教授(七篇 1·2章)

(執筆順)

大邱市史 第一卷

1995年 1月 18日 印 刷
1995年 2月 20日 發 行

發 行 大 邱 廣 域 市
編 著 大 邱 市 史 編 纂 委 員 會
印 刷 大 邱 慶 北 印 刷 工 業 協 同 組 合
